

##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

정용택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기독교경제윤리의 연구 지평과 윤리적 비판의 대상
  - 1. 기독교경제윤리의 학문적 위치와 연구 대상
  - 2. 윤리적 비판 대상으로서의 자본주의
- III. 지대추구 자본주의 시대의 기독교경제윤리
  - 1.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출현과 그 특성
  - 2.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경제적 비판
- IV. 도덕경제적 비판의 한계와 기독교경제윤리적 대안
  - 1. 도덕경제적 비판의 한계
  - 2.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의 대안적 근거들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1.11>

---

• ABSTRACT •

---

## A Christian Economic-Ethical Critique of Rentier Capitalism

Research Prof., Jeong, Yong Taek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rentier capit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Rentier capitalism is a new type of contemporary capitalism that makes money just by owning and controlling assets, without doing any actual work or creating real value, which increase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study reviews Andrew Sayer's moral economic critique of rentier capitalism based on the concepts of 'improperty' and 'unearned income' and discusses both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s an alternative, it proposes the concept of 'commons,' theologically justifying it by connecting with Paul's concept of 'gift' and Minjung theologian Ahn Byung-Mu's concept of 'public' (公, *Gong*). In summary, this study highlights that Christian economic ethics need to address the moral and ethical issues in today's society by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rentier capitalism and offering a different vision for a fair and sustainable economy.

**Key words:** Rentier Capitalism, Improperty, Unearned Income, Commons, Public, Gift

---

## I. 들어가는 말

21세기 들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과거의 산업 생산과 노동 중심의 경제에서 금융, 부동산, 지식재산권, 디지털 플랫폼 등 자산 소유에 기반한 경제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현재 학계에서는 ‘지대추구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 또는 ‘지대추구주의’(rentierism), ‘지대추구체제’(rentiership) 등의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지대’(rent)란 생산적 노동이나 실질적 가치 창출 없이 단순히 자산 소유권이나 통제력을 통해 추출되는 수익을 의미한다.

지대추구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는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계급 분할, 민주주의의 침식, 환경 파괴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소수의 지대추구자들에게 사회적 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은 불안정한 경제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화, 자산화, 플랫폼화,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동반하면서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생산적 경제 활동보다 자산의 소유와 통제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경제 활동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계급 분할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윤리적 규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경제윤리적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사회적 특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독교경제윤리적 관점에서 적절한 비판의 논리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

경제윤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신학적 차원에서 윤리적 판단과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독교경제윤리의 자본주의 비판의 전통에 입각하여, 이 글은 도덕경제적 관점에서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세이어(Andrew Sayer)의 논의를 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경제윤리적 대안으로서 ‘공유부’(commons) 개념을 바울신학의 ‘선물’(gift) 개념 및 민중신학자 안병무의 ‘공’(公) 개념과 연결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

논문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II장에서 기독교경제윤리의 학문적 위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윤리적 비판의 필요성을 논구한다. 이어서 제III장에서는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역사적 출현 과정과 그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유력한 비판 논리로 채택되고 있는 도덕경제적 관점을 검토한다. 제IV장은 도덕경제적 비판의 한계를 세이어의 불로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그 대안으로 공유부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이를 기독교경제윤리적 관점에서 바울신학의 선물 개념 및 안병무의 공 개념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지대추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되는 도덕적·윤리적 불의에 대응할 수 있는 신학적 자원과 윤리적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 II. 기독교경제윤리의 연구 지평과 윤리적 비판의 대상

기독교윤리학자들은 기독교경제윤리 연구를 수행할 때 두 가지 질문과 먼저 대면하게 된다. 하나는 기독교경제윤리가 기독교윤리학 내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경제윤리가 다루는 경제가 어떤 경제를 말하는가이다. 결국 두 가지 질문은 기독교경제윤리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풀어 가면서 이 글의 주제인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의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 1. 기독교경제윤리의 학문적 위치와 연구 대상

기독교경제윤리는 기독교윤리학 안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경제윤리를 신학적 관점의 경제윤리로 규정하고, 그것을 상위 학문인 사회윤리의 특수사례 또는 특수한 형태로서 제시한다.<sup>1)</sup> 예컨대, 독일의 사회윤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리히(Arthur Rich)는 경제윤리를 그 자체로 독립적인 분과 학문이 아니라 사회 제도의 구조와 관련된 체계적 윤리로서 이해되는 사회윤리를 (결혼윤리, 가족윤리, 정치윤리 등과 더불어) 구성하는 하위 분과로 지칭한다. 물론 리히는 경제윤리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생활과 제도들의 중요성과 복잡성의 측면에서 사회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영역임을 주지시킨다.<sup>2)</sup>

마찬가지로 한국 신학계를 대표하는 경제윤리학자이자 민중신학자인 강원돈(姜元敦) 역시 최근에 출간한 『기독교경제윤리론』에서 “기독교경제윤리가 직업윤리나 전문가 윤리와 같은 개인 도덕이 아니라 제도를 규율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선과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1) 이 글에서는 ‘기독교윤리’와 ‘기독교사회윤리’를 혼용한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시민들 그리고 비인간 동물이나 자연, 나아가 비유기체적 사물들과도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결정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작동시키고 있는 물질적 제도들을 매개로 하여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사회윤리’가 아닌 ‘개인윤리’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 역시 본질적으로 ‘기독교사회윤리’일 수밖에 없으므로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

2)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Bd. 1,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강원돈 역,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74-75.

집중하는 사회윤리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sup>3)</sup> 그에 따르면 사회윤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가 펼쳐지는 장(場)인 제도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제도 윤리라는 이름을 갖고, 제도들을 매개로 해서 인간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것’의 윤리로 지칭”되는데, 기독교경제윤리 역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맺는 제도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사회윤리의 한 특수한 형태”라는 것이다.<sup>4)</sup>

물론 두 학자는 기독교경제윤리를 한편으로 특별히 기독교적이기 전에 일단 ‘경제윤리’ 자체에 집중하여 그 학문적 위상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사회윤리의 특수사례 내지는 특수한 형태로서 논하는 데 전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경제윤리의 신학적 특수성을 “단순히 요구만 하는 명령법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도래하는 하느님 나라의 미래 (*Zu-Kunft*)로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직설법<sup>5)</sup>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기독교경제윤리가 일반적 의미의 경제윤리가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더

3)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서울: 동연, 2024), 46-47. 기독교경제윤리의 유형 속에서 강원돈의 기독교경제윤리의 방법론적 의의와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최경석,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유형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9(2024), 89-118을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기독교경제윤리론』의 학술적 기여와 이론적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서평 논문들을 참조하라. 최경석, “강원돈의 『기독교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에 대한 서평,” 『신학사상』 205(2024), 303-314; 최형목,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대작.”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19>, 2025년 3월 15일 접속; 정용택, “무늬만 대작이 아니다.”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76>, 2025년 3월 15일 접속; 홍인식, “시장경제체제를 ‘규율’해 ‘해방’의 사회로.”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19>, 2025년 3월 15일 접속.

4)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33-34.

5) Rich, 『경제윤리 1』, 282.

많은 선과 더 많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실의 경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임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이상의 논의를 참조했을 때, 기독교경제윤리는 그보다 더욱 포괄적인 사회윤리학과 기독교윤리학 양자에 모두 속해 있는 그야말로 학제적 연구로서 신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제 제도들 및 그것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현존하는 경제 제도와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이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독교사회윤리의 특수한 분과로 정의될 수 있다.<sup>7)</sup>

그렇다면 기독교경제윤리의 대상인 ‘경제’(economy)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일단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은 경제를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 교환, 소비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사회 현상으로 정의한다.<sup>8)</sup> 리히 역시 유사하게 『경제윤리』에서 경제를 “인간 생활의 물질적 보존과 안정 그리고 축진에 이바지하는 조치들과 계획들의 총체”로 정의

6)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31.

7)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 탐색을 고취하는 사회적 정의론을 여타의 해방적 사회과학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독교경제윤리는 현존하는 제도와 사회구조의 대안들에 관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이론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지닌다. 뒤에서 소개할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해방적 사회과학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대안들이 “바람직함, 실행 가능성, 성취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다른 기준들에 의해 정교화되고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기준들은 “윤리적 판단의 기준에 내포된 당위적인 요구에 충실하면서도 역사적인 제약조건들 아래서 제도적인 것을 규율하는 행위의 지침이나 대안정책의 구상”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경제윤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Erik Olin Wright, *Envisioning Real Utopia*, 권화현 역, 『리얼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서울: 들녘, 2012), 54-61; 강원돈, “교의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치,”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70.

8)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1), 4-5.

한다.<sup>9)</sup> 나아가 그는 경제의 근본 목적이 인류의 문화 발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삶을 돕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경제를 단순한 물질적 교환이나 이윤 창출의 시스템이 아닌 인간의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는 더 넓은 활동으로 제시한다.

이렇듯 지구에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경제 활동은 개인과 집단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경제 활동은 부족 공동체, 노예제, 봉건제, 자급자족 가정,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모든 경제체제의 공통점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인간의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어떤 사회든 경제체제를 갖고 있으며, 이 체제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배·소비 과정에서 어떤 노동이 수행되는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리고 생산물이 어떤 원칙으로 분배되는지를 결정한다. 경제체제는 본질적으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노동자 등 경제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며, 이는 직접적인 대면 관계부터 전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와 같은 비대면 관계까지 포함한다. 또한 관습, 법률, 정치, 기술, 지리적 조건, 종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sup>10)</sup>

경제체제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했을 때, 기독교경제윤리는 그 모든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독교경제윤리가 사회윤리의 하위 분과 내지는 그것의 특수한 형태임을 고려한다면, 기독교경제윤리의 대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sup>11)</sup>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기독교경제윤리가 “경제체제의 규율

9)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Bd. 2, Marktwirtschaft, Planwirtschaft, Weltwirtschaft aus sozialer Sicht*, 강원돈 역, 『경제윤리 2: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시장경제, 계획경제, 세계경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57.

10) Samuel Bowles et al., *Understanding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52-56.

을 위해 사회과학적 현실 분석과 신학적 성찰을 매개하는 관점과 방법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이를 메타 이론의 수준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 신학과 사회과학과 철학의 협업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한다면,<sup>12)</sup> 오늘날 그런 엄밀한 사회윤리적 규율이 요청되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sup>13)</sup> 따라서 기독교경제윤리는 다양한 경제체제를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크고 현실적인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독교사회윤리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경제는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했으나,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약 300년 전에 확립되었다. 자본주의의 출현으로 인구 증가, 도시화, 기술 발전, 대규모 이주, 물질적 번영 증가 등 경제학이 다루는 중요한 현상들이 발생했다. 위의 책, 17-19. 대표적인 비주류경제학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연구하는 협의의 경제학과 다른 생산양식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경제학을 구분한다. 체계적 이론 전개를 위한 필수적 연구 대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뿐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만이 물화된(reified) 관계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전 사회들의 경제체제 연구는 ‘경제사의 범주에 속한다. Teinosuke Otani, *A Guide to Marxian Political Economy* (Berlin: Springer, 2018), 85.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기독교경제윤리도 광의의 경제윤리학 또는 경제윤리사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협의의 경제학에 대응하여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규율을 모색하는 접근을 기독교경제윤리로 규정한다.

12)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9.

13) 그래서 리히는 『경제윤리』 제2권에서 경제의 의미를 해명한 후 현대 산업경제의 제반 측면들을 상세히 분석했다. 그는 산업경제의 합리화 과정, 생산요소 검토, 경제주체, 시장의 다양성과 경계 철폐, 다국적화, 경제성장 등을 언급한 후 경제윤리의 주요 문제들을 정리했다. Arthur Rich, 『경제윤리 2』, 57-172. 이는 리히의 기독교경제윤리가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제 붕괴 시점인 1990년에 이미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자본주의적 산업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강원돈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민중신학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 모순 극복을 위한 원리와 방안을 고민하며 신학적 경제윤리 연구에 착수했다. 특히 1992년 논문에서 그는 당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강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강조하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체계의 모색을 신학적 경제윤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원돈, “신학적 경제윤리 형성을 위한 시론,” 『신학사상』 76(1992), 67-70; 최경석,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유형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 99.

## 2. 윤리적 비판 대상으로서의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마치 공기처럼 당연시되는 체제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칠레, 프랑스,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경제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 국가로 자신들의 체제를 규정하는 중국조차도 더 높은 단계의 체제인 공산주의로 도약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발전 노선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자본주의는 지배적인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세계체계’(capitalist world-systems)로 자리를 잡았다.<sup>14)</sup>

그러므로 이토록 보편성을 획득한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를 기독교경제윤리가 탐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독교경제윤리가 자본주의를 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가일 것이다. 호주의 종교사회학자 아브라함(Ibrahim Abraham)은 기독교경제윤리를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로 간주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의 네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을 분류한 바 있다. 그의 정리를 살펴보자.

첫째 친(親)자본주의적(Pro-Capitalism) 접근은 기독교와 자본주의 간의 강한 동맹을 강조한다. 이 입장은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 경제를 지지한다. 이들에게 자본주의의 문화와 윤리는 기독교와 동일시된다. 둘째 도덕적 규제(Moral Regulation of Capitalism) 접근은 자본주의의 윤리적 한계 설정을 주장한다. 이 입장은

14) 세계체계 분석의 대표적 이론가인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 세계체계는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100년 이상 이어진 시기에 등장해 지금까지 500년 정도 지속된 체계이다.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로서의 자본주의 분석에 대해서는,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서울: 그린비, 2006), 183-250 참조.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자본주의적 문화 및 윤리와 기독교 전통을 동일시하는 것은 경계한다. 종교적 전통에 근거하여 자본주의를 일정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도덕적 개혁(Moral Reform of Capitalism) 접근은 자본주의의 윤리적 개혁을 주장한다. 이 입장은 자본주의의 기본 방향에 회의적이며, 무분별한 상품화나 시장화, 착취적 임금노동 구조 등에 관해 철저한 개혁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반(反)자본주의(Anti-Capitalism) 접근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적 경제체제를 모색한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경제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아나키즘, 공산주의, 자율주의(autonomism), 포스트자본주의(post-capitalism)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경제체제 이론들을 폭넓게 수용하여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탐구한다.<sup>15)</sup>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본주의를 대하는 기독교경제윤리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첫 번째 친자본주의적 입장을 제외한다면 기독교경제윤리는 세부적 해결 방안에서 차이를 드러낼지라도 자본주의를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체제로, 그래서 규제든 개혁이든 대안이든 규율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경제윤리학자들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규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sup>16)</sup> 요컨대 “어떤 윤리적 주요문제들이 체제로서의 경제에 제기”되기에 신학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윤리적 개입이 요청되는 것인가?<sup>17)</sup>

15) Ibrahim Abraham, “Capital, Culture and Contradictions: Contemporary Christian Economic Ethics,” *Pacifica* 22/1(2009), 53-74.

16)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13.

관련하여 사회학자 라이트가 그의 ‘리얼 유토피아’(Real Utopia) 구상에서 제시한 ‘자본주의에 대한 열한 가지 비판’은 기독교경제윤리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경제체제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해악’(harms)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sup>18)</sup>

- ①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인간의 고통을 제거 불가능하게 영속화한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할된 계급관계를 유지하며, 이로 인해 빈곤과 착취가 지속된다. 기술과 자원이 충분한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조건의 보편화를 막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 의료, 주거 등의 필수적 자원이 시장 논리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경제적 지위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③ 임금노동을 본위로 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저해한다.

자본주의는 형식적으로 자유 시장을 보장하지만, 경제적 약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된다. 특히, 생계를 위해 원치 않는 일을 강요받거나, 노동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17) Rich, 『경제윤리 2』, 189.

18) Wright, 『리얼유토피아』, 73-135.

- ④ 자본주의적 분배 관계는 사회정의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자본주의는 법적으로 평등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와 권력이 집중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유지된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법적 평등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 ⑤ 자본주의적 경쟁 구조는 어떤 결정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한다고 주장하지만, 불필요한 중복 투자, 단기적 이익을 위한 자원 낭비, 시장 실패 등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 ⑥ 자본주의적 성장 논리는 기후 위기를 포함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보다 이윤 창출이 우선시된다. 이로 인해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악화되며,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⑦ 자본주의가 유도하는 시장화는 소비주의를 조장한다.

자본주의는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인위적인 욕구를 창출하며, 이는 과소비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 ⑧ 만물의 상품화를 향한 집요한 자본주의의 추세는 사회적 가치를 위협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 건강, 교육,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다. 돈을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되면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 ⑨ 자본주의적 경쟁의 강제법칙은 국민국가 체제에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부추긴다.

자본주의는 세계시장에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며, 이는 군사적 충돌과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쟁과 침략은 지

금도 반복되고 있다.

- ⑩ 자기조정적(self-regulating) 시장경제를 통해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적 경쟁을 강화하면서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유대를 약화시킨다.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던 사회들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면서 공동체적 삶이 위협받고 있다.

- ⑪ 정부와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경제권력의 지배력을 통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침식한다.

세계 각국에서 자본가·기업가 출신의 정치지도자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데서 보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거대 기업과 부유층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의 민주적 의사 결정이 왜곡될 위험이 커진다.

라이트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정책적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도덕적·윤리적 해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라이트의 비판은 기독교 신학이 자본주의를 성찰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이러한 해악들을 통해 자본주의가 단순한 경제체제의 하나가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형태의 도덕적·윤리적 문제들이 공고하게 구조화된 사회 질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경제윤리는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다층적 윤리적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응답을 제시해야 한다. 라이트가 지적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열한 가지 도덕적·윤리적 해악은 단순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의 유지, 환경의 보전, 그리고 정의로운 분배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과 직접적으

로 충돌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경제윤리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와 그 신학적 의미를 성찰하고, 인간 공동체와 창조 질서 전체를 아우르는 대안적 경제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앞서 소개한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의 네 가지 접근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입장이 지닌 통찰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규율하고 개혁하며 때로는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생산과 소비의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 자원 분배, 환경, 정치 및 사회체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도덕적·윤리적 결과를 초래하는 체제이므로, 기독교경제윤리는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윤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 III. 지대추구 자본주의 시대의 기독교경제윤리

경제지리학을 중심으로 최근 사회과학계에서는 자본주의가 노동과 생산을 통한 ‘이윤’(profit)의 획득보다는 ‘자산’(assets)의 소유 및 독점을 통한 ‘지대’(rent)의 추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sup>19)</sup> ‘지대추구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의 등장으

19) 자산과 지대에 관한 논의를 촉발한 결정적 계기는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의 출간이다. 세계 경제 차원에서 불평등의 역사적 동역학을 분석한 『21세기 자본』은 직접적으로 지대와 지대수취자를 주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의 변형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지대 개념을 핵심 변수로 활용했다. 피케티가 제시한 ‘ $r > g$ ’ 공식( $r$ 은 자본수익률,  $g$ 는 경제성장률)은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의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심화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크리스토퍼스의 지적대로, 여기서  $r$ 은 사실상 기존 자산 저장(capital stock)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지대수익률을 의미한다. 결국 『21세기 자본』은 지대 개념을 학문적 논의의 중심에 재위치시켰으며,  $r$ 이  $g$ 를 초과하는 경향이 불평등 심화의 근본 원인을 드러냄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분석에서 지대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장경덕 역, 『21세기 자본』(서울: 글항아리, 2014); 지대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피케티의 기여와 한계에 대해서는 Brett Christophers, “The Problem of Rent,” *Critical Historical Studies* 6/2(2019), 303-323 참조.

로 명명되는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플랫폼 경제 및 자산 경제의 확대, 부동산·주식·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통한 ‘일상생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everyday life) 등과 맞물려 학계 안팎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차원에서 지대추구주의(rentierism)의 강화는 생산의 플랫폼화(platformization), 사물의 자산화(assetization), 대중의 지대추구자화(rentierization)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환으로, 다양한 관점을 통해 그 변화의 함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sup>20)</sup>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기독교경제윤리가 비판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지대추구 자본주의 역사적 배경과 그것이 이전의 경제체제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살펴본다.

### 1.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출현과 그 특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독교경제윤리의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 곧바로 부딪치는 난점은 자본주의가 고정불변의 “정태적인 제도들의 집합”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고, 재건되며, 진화하는 동태적인 체제”라는 사실이다.<sup>21)</sup> 자본주의는 더 많은 잉여가치 생산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기술, 생산과정, 기업 조직 등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발전해 왔다. 자본의 확대재생산은 잉여가치를 이윤으로 전환함으로써만 가능하기에, 무한한 잉여가치 축적 추구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절대 법칙’으로 남아 있다.

20) 금융화와 연결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구별되는 자산화 현상의 특성에 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정용택, “자산화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가치형태의 문제를 중심으로,” 『뉴래디컬리뷰』 7(2023), 35-69; 현대 자본주의 분석에서 자산과 소유권, 지대 개념의 재등장과 관련한 포괄적 검토로는, 이승철, “익숙하고도 낯선 자본주의—신체굴주의와 기술 봉건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문학동네』 120(2024), 88-105 참조.

21) 김미경, “자본주의 진화와 다양성: 신자유주의에 관한 신화와 오류,” 『국제정치논총』 52/2(2012), 315.

앞서 살펴본 자본주의에 대한 열한 가지 비판 역시 라이트가 견지하는 사회학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20세기를 지배했던 산업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 즉 “자본주의가 어떤 ‘계급관계’를 가지는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 ‘경제조정’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적으로 특수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라이트는 산업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자본주의를 사회의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하며, 두 가지 주요 차원에서 그 특징을 규정한다.<sup>22)</sup>

첫째, “사적 소유와 무산 노동자들에 의해 정의되는 계급관계”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유되며 자본가나 그 대리인에 의해 통제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임금을 얻기 위해 자본가가 소유한 기업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한다. 둘째, “탈중앙집권적 시장교환을 통해 조직되는 조정”이 자본주의 경제 조정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경제 조정은 주로 ‘자유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 이 두 특징의 결합은 자본주의 기업의 이윤추구와 자본축적을 위한 경쟁적 추진력을 생성한다. 각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며,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경쟁 압력은 자본주의만의 독특한 동역학을 생성하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계속 진화해 왔다. 제국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관리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포스트)포드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플랫폼자본주의 등과 같이 특정한 방식의 용례들은 모든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와 시공간적 변이에 대한 이론화의 산물이다.<sup>23)</sup>

22) Wright, 『리얼유투피아』, 69-72.

23) 시대구분을 통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유형화에 관해서는 Gérard Duménil & Dominique Lévy, “Periodizing Capitalism: Technology, Institution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Robert Albritton et al. eds.,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Boons, Crises and Globalizat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1), 141-162 참조. 이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구분 및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회과학자가 자본주의의 최신 형태에 대한 명칭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지대추구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다.<sup>24)</sup>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되는 ‘지대’ 개념의 확대·적용과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자본주의 분석틀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지대추구(rent-seeking)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로 인한 이윤, 즉 노동에 대한 착취를 통한 잉여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과 같은 자산의 실제적·잠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들이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흐름’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이나 권력에 의한 통제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추출하는 과정이다.<sup>26)</sup>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등장한 것인가? 글로

---

논문의 저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기술’(생산력 발전의 수준), ‘제도’(국가와 정책), ‘생산관계’(계급관계, 계급투쟁, 계급타협 등)를 기준으로 삼아 자본주의를 시대구분하고, 자본주의의 역사적 단계를 제국주의·관리자본주의·포드주의 및 계급 타협·금융화·신자유주의로 정리한다.

- 24) 국내에 소개된 지대추구 자본주의 연구서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Guy Standing,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김병순 역, 『불로소득 자본주의: 부패한 자본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서울: 여문책, 2019); Michael Hudson, *The Destiny of Civilization: Finance Capitalism, Industrial Capitalism or Socialism*, 조행복 역, 『문명의 운명: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인가』(서울: 아카넷, 2023); Brett Christophers, *Rentier Capitalism: Who Owns the Economy, and Who Pays for It?*, 이병천 외 공역,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누가 경제를 지배하고 그들은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가?』(서울: 여문책, 2024); Andrew Sayer, *Why We Can't Afford the Rich*, 전강수 역,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서울: 여문책, 2024).
- 25) Christophers,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35.
- 26) Kean Birch & Callum Ward, “Introduc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ntiership,” *Environment & Planning A: Economy & Space* 55/6(2023), 1429; Andrew Sayer, “Rentiership. Improperly and Moral Economy,” *Environment & Planning A: Economy & Space* 55/6(2023), 1475.

별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출현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직면했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sup>27)</sup> 당시 세계 자본주의는 자본의 과잉 축적과 수익성 감소, 생산성 성장률 저하, 임금 상승 등의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윤율 하락, 생산성 증가율 둔화, 임금 상승이라는 세 가지 주요 경제지표가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노동운동의 격화를 가져왔다.

이 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등장한 변화의 시발점은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이었다. 이로 인해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화폐와 금융의 세계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와 금본위제 변형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과 통화규제 제도였으나, 1960년대 후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경제 회복으로 미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붕괴되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했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촉진되고, 통화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다. 상업은행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앙은행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긴축정책이 우선시되고, 국제 금융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확장적 정책의 여지는 줄어들었다. 또한 국내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측 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케인스주의 경제체제의 기반이 와해되면서 금융자본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경제 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sup>28)</sup> 이에 따라 자

27)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에 이어 신자유주의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통한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135-164 참조. 1970년대의 위기로부터 금융화를 거쳐 지대추구 자본주의가 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Kevin R. Cox, "Rentierism and the Question of Capitalist Development," Balihar Sanghera ed., *Global Rentier Capitalism: Theory and Development*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4), 96-107을 참조하라.

본주의는 전통적인 생산 기반의 축적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자산과 지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적체제, 즉 ‘금융화된 자본주의’로 변화하였다.<sup>29)</sup>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금융 수익에 집중하였으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노동력 착취 구조를 강화했다.<sup>30)</sup> 결국 1970년대의 위기는 지대추구주의의 부상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대추구의 강화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이상의 1970년대 위기의 대응책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와 국제분업이 지대추구 자본주의 출현의 토대가 되었다. 이는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 즉 미래의 소득 흐름에 대한 청구권의 폭발적 증가와 산업 자본의 새로운 지리적 배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로 이어졌다.<sup>31)</sup> 1980

28) Gérard Duménil & Dominique Lévy, *Managerial Capitalism*, 김덕민 역, 『관리자본주의』 (성남: 두번째세계, 2023), 146-155.

29) 금융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의 본질을 가공자본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온 일군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금융화 현상은 “신용으로, 부채 레버리지로, 독점적 기간시설을 공적 영역에서 빼앗아 사영화함으로써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격을 부풀리고 금융 부문의 인도에 따라 독점 지대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런 금융화에 의한 “자본주의의 구조변동으로 과거의 민주적 자본주의 질서가 종언을 고한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udson, 『문명의 운명』, 61; 배병인, “금융화와 민주주의 위기의 정치경제: 민주적 자본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17/1(2024), 19.

30) 박찬중, “금융화: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 『말과환』 11(2016), 327-328.

31) 가공자본은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서 주식, 채무채권, 보험, 파생상품처럼 증권이나 금융자산이 창출될 때마다 발생하는 허구적·가공적 형태의 자본을 가리킨다. 가공자본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시장 투자: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당금과 자본이득), ② 주택담보대출(mortgages): 원금과 이자 상환이 보장되지 않는 ‘가공적’ 성격의 대출, ③ 국채(government bonds): 정부가 국제수지 적자나 국내 지출과 수입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해 판매하는 채권. 198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가공자본을 거래하는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확대되었다. 금융화 현상을 가공자본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저작으로, Cédric Durand, *Fictitious Capital: How Finance Is Appropriating Our Future* (London:

년대부터 형성된 주주혁명은 주주들을 지대추구자로 만들었으며, 이들은 배당금 증가와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경영진의 보수가 스톡 옵션으로 보완되면서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대 추출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노동력에 의한 가치 생산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생산을 개발도상국의 하청업체나 지사로 이전하면서, 본사는 선진국에 유지하며 브랜드, 지식재산권, R&D, 상표, 유통망 등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생산자들에 대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그렇다면 역사의 ‘거대한 전환’을 통해 부상한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로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그 답은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부의 축적과 보존이 생산적 활동보다 자산 소유와 지대 수취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특히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지리학자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에 따르면,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최상위 부유층이 부를 축적하는 일곱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다.<sup>32)</sup>

첫째, 금융화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주식, 채권, 배당금, 경영진 보너스 등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을 적극 활용한다. 둘째, 천연자원 개발과 판매를 위한 정부 또는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대를 확보하며, 이는 자원 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한

Verso, 2017)을 보라. 경제신학적 관점에서 가공자본 개념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정용택, “금융화된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신학-물신숭배 비판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8(2022), 93-108 참조.

32) Christophers,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42-48. 크리스토퍼스의 불로소득 자본주의 이론에 관한 보다 압축적인 설명으로는, Brett Christophers, “The Rentierization of the United Kingdom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5/6(2023), 1438-1470을 참조할 수 있다.

다. 셋째,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IP)의 소유를 통해 독점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특히 제약 산업(Big Pharma)이 이러한 구조에서 큰 수혜를 입는다. 넷째, 대형 기술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다섯째, 정부가 외주화한 공공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중요한 지대추구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여섯째, 민영화된 공공 인프라를 인수한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토지의 민영화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지대를 창출하는 것이 부유층의 주요 자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며, 생산보다 지대 수취에 기반한 부의 축적 방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대 수취에 기반하여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경로들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결합하면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지대추구주의가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게 만든 것이다.<sup>33)</sup>

## 2.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경제적 비판

지대추구 자본주의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해악을 공유하기 때문

33) 관련하여 현재 학계에서 자산화 및 지대추구주의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지리학자 버크(Kean Birch)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경제나 주체성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나 기업가주의의 장소나 중심지로 변형되지 않았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지대추구체제의 형태, 또는 법령(법률, 규제, 표준), 독점권(지식재산권), 그리고 조직 구성(네트워크 외부성,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비생산적인) 가치 전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Kean Birch, *A Research Agenda for Neoliberalism* (Cheltenham: Elgar, 2018), 131.

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특별한 윤리적 규율이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학술적 논의에서는 지대추구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자본주의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34)</sup>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해악을 공유하면서도 특정 영역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대 자본주의의 차이와 변화를 특징짓는 지대추구주의는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행태를 의미하며, 이는 생산적인 노동이나 창조적 가치 생산 없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금융, 부동산, 천연자원, 디지털 플랫폼, 지식재산권과 같은 다양한 자산이 지대의 원천이 되며, 소유자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지대는 임금이나 이윤과는 구별되며, 자산을 필요로 하지만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일정 부분 흡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치 착취는 지대소유자의 기여에 비해 지나치게 크며, 본질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하지만, 법적·제도적 규범과 사회적 관행을 통해 정당화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기에 “소득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원인 동시에 그 가치가 그 미래의 소득 흐름과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 경향(예를 들어, 장기 수익률)과의 관계를 자본화함으로써 결정되는 재산”으로 정의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권리 측면에서 정당화되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시하는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sup>35)</sup>

글로벌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바로 이처럼 지대와 지대소유자가 경제를 지배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대추구 활동은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34) Birch & Ward, “Introduction,” 1475.

35) Kean Birch & Callum Ward, “Assetization and the ‘New Asset Geographies,’”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4/1(2024), 9; Sayer, “Rentiership, Impropriety and Moral Economy,” 1476.

와 비교했을 때도 윤리적으로 더욱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 첫째, 그것은 부의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킨다. 지대 중심의 경제구조는 강력한 자산 소유 계층과 무자산 계층 간의 격차를 확대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만, 저항,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정치 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되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정치(plutocracy)가 지배하게 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공익이 아니라 소수 자산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왜곡된다. 셋째, 지대추구 활동은 환경 파괴를 더욱 가속화한다. 석유 채굴, 광산 개발과 같은 착취적 지대추구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며, 사치스러운 탄소 소비(private jets, 우주여행 등)도 기후 위기를 심화시킨다. 넷째, 국제적인 갈등과 경제적 긴장을 증대시킨다.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권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 무역, 기술,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제재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sup>36)</sup>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지대추구는 오히려 기업가적 혁신과 성공의 상징으로 미화되었으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을 받으면서 더욱 확산되고 강화되었다. 금융 레버리지, 사적 연금, 학자금 대출,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플랫폼 노동, 공공부문 계약, 조세회피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대추구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36)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칼 마르크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헨리 조지, 존 A. 홉슨, R. H. 토니 등 많은 경제사상가들이 지대추구 계급의 불공정성과 비생산성을 비판했다. 지대소유자는 생산적인 경제 활동 없이 부를 축적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미미한데도 부를 독점하는 행태는 부당하다고 평가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대추구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舊)소련에서는 지대소득이 기생적이고 투기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범죄화되었으며, 유대교나 무슬림 같은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은 고리대금과 투기를 죄악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려 했다. 다만 2006~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대추구주의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것이다.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대추구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전환 과정에서 남반구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 금융기관과 원조기관들은 지대추구적 경제 모델을 개발 전략으로 권장하며, 자원 채굴과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를 빈곤 퇴치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엘리트와 외국 투자자들은 에너지, 광물, 부동산 개발, 금융 및 통신 부문에서 지대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다. 현대 지대추구주의는 단일한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얽혀 형성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적극적 지대추구자(투자은행, 부동산 개발업자, 자산운용사 등)는 대규모 인력과 기술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대를 추출하며, 수동적 지대추구자(대형 기관투자자, 대지주 등)는 자산 소유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는다. 또한 법률가, 회계사, 주식중개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다양한 중개자들이 지대추출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결정적으로 지대추구주의를 경제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이유는 부 창출과 지대 추출 사이에 중요한 도덕경제적 구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sup>37)</sup> 여기서 ‘도덕경제’(moral economy)란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이 도덕적 성과와 규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구조화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를 가리킨다.<sup>38)</sup> 이 개념은 경제가 단순히 시장 거래나 자본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도덕경제의 관점에서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연구해 온

37) Balihar Sanghera, “Critical Introduction,” Balihar Sanghera ed., *Global Rentier Capitalism: Theory and Development*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4), 3. 도덕경제적 관점에서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정치적·윤리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작으로는, Sanghera Balihar & Elmira Satybaldieva, *Rentier Capitalism and Its Discontents* (Berlin: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1)을 참조할 수 있다.

38) Andrew Sayer, “Approaching Moral Economy,” Christoph Henning ed., *The Moralization of the Marke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7), 78.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사회학자 세이어(Andrew Sayer)이다.<sup>39)</sup> 세이어는 최근 40년간 지대추구주의가 부활하여 형성된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규정한다. 그는 도덕경제적 접근을 통해 경제적 정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본-노동, 임대인-세입자, 채권자-채무자, 국가-시민 등의 관계가 어떤 불합리한 시장 교환이 아닌 고도로 정치적·윤리적인 권력과 배제의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세이어는 지대추구주의를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 내지는 정상적·합리적 자본주의에서 일탈한 변종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부의 이전과 관련된 자본주의적 해악의 극대화라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독교경제윤리와도 상통하는 지점이 많다.

도덕경제적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대가 특정 자산(토지,

39) 세이어는 그간의 저작들에서 도덕경제 개념을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 ‘도덕경제로서의 경제 일반’, ‘연구 양식으로서의 도덕경제’, ‘비판으로서의 도덕경제’가 그것이다. ① 자본주의적 경제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가 도덕경제들(moral economies)이라는 중요한 이론적 주장을 구현한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는 자신들의 주요 제도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도덕적/윤리적 정당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② 그것은 도덕적 경제들을 연구하고 서술하며, 설명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도덕경제”는 공식적, 비공식적 경제 관행을 구조화하고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규범과 감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 압력에 의해 강화되거나, 타협되거나, 무시되는 방식을 연구”한다. ③ 그것은 경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경제적 제도배열이 인간의 번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경제 제도와 관행의 규범적 의미와 평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접근 방식으로서 도덕경제는 가장 중요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 조직의 기본적 특징들, 특히 재산 관계와 제도 및 개인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Andrew Sayer, “Moral Economy, Unearned Income, and Legalized Corruption,” David Whyte & Jörg Wiegratz eds., *Neoliberalism and the Moral Economy of Fraud*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6), 44-56; Andrew Sayer, “Moral Economy as Critique,” *New Political Economy* 12/2(2007), 261-270; Dave Elder-Vass, “Moral Economy: A Framework and a Manifesto,” Balihar Sanghera & Gideon Calder eds., *Ethics, Economy and Social Science: Dialogues with Andrew Say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2), 97-105 참조. 이상의 세 가지 용법은 ‘기독교경제윤리’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데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 지식재산권, 플랫폼 등)의 희소성이나 독점적 통제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며, 이는 생산적인 기여 없이 단순한 소유만으로도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이어는 노동을 통해 창출된 ‘근로(勤勞)소득’(earned income)과 창출되지 않은 ‘불로(不勞)소득’(unearned income)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여 ‘부를 창출하는 투자’(wealth-creating investment)와 ‘부를 추출하는 투자’(wealth-extracting investment)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노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므로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만, 단순히 자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하는 불로소득은 결국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부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sup>40)</sup>

세이어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부당소유’(improperty)라는 개념을 제시한다.<sup>41)</sup> 그는 기존 경제학이 ‘소유’(재산, property)라는 개념을 일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산 소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그는 ‘정당한 소유’(property-H)와 ‘부당(한) 소유’(improperty)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2)</sup> 정당한 소유(property-H)는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생산활동을 위해 소유하는 재산(예: 개인 주거, 노동자의 도구 등)을 의미하는 반면, 부당소유는 타인의 필요를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소유 형태(예: 임대 부동산, 금융상품, 지식재산권 등)를 뜻한다. 이러한 ‘부당소유’는 생산적인 기여 없이도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세이어는 밀(John

40) Sayer,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제』, 63-149.

41) Sayer, “Rentiership. Improperity and Moral Economy,” 1476-1481.

42) 세이어에 따르면, 토니(R.H. Tawney)는 이를 “기능 없는 재산”이라 불렀으며, 홉하우스(L.T. Hobhouse)는 “사용을 위한 재산”과 “권력을 위한 재산”을 대비시켰다. 위의 논문, 1476.

Stuart Mill)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주들은 아무런 노동이나 절약 없이 수면 중에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지대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가치 생산에 대한 기여 없이 얻어진 수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sup>43)</sup>

세이어는 부당소유에 기반한 지대추구주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금융화와 플랫폼 경제의 확산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자본가와 지대추구자 모두 부당소유를 기반으로 이익을 얻지만, 산업자본가는 노동력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반면, 지대추구자는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산 소유만으로 부를 축적한다. 그러므로 지대추구 경제는 경제적 의존성을 악용해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강화하며,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이어는 지대추구주의의 억제와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공공 투자 확대, 플랫폼의 공공 소유화, 토지 가치세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이처럼 도덕경제적 비판을 통해 지대추구주의가 단순히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제체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당한 소득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경제체제이며, 정당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윤리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청

43) 위의 논문, 1475. 고전 정치경제학에서부터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전통에서는 이자와 지대를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상품들로부터 가치를 ‘이전’받았을 뿐 추가된 가치는 없는,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획득된 불로소득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자본주의의 금융화와 더불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조차도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유통영역’ 또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그것이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적 ‘리스크’(위험, risk)의 생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의 가치 생산 여부에 관한 상세한 논쟁과 대안적 접근은 Brett Christophers, “Risking Value Theory in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e and Na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3(2018), 330-349 참조.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 IV. 도덕경제적 비판의 한계와 기독교경제윤리적 대안

앞서 살펴본 세이어의 작업에서 확인되듯이, 전 지구적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도덕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규율 방법을 모색해 온 기독교경제윤리가 신학 자체의 윤리적 자원들과 도덕경제의 통찰을 결합한다면,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논의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경제학에는 결정적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경제윤리는 도덕경제학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지대추구 자본주의 연구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세이어의 도덕경제학적 지대추구 자본주의 비판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의 근거를 제시한다.

##### 1. 도덕경제적 비판의 한계

세이어의 도덕경제적 지대추구주의 비판은 두 가지 차원의 개념적 구분, 즉 한편으로 소유의 차원에서 정당한 소유와 부당소유의 구별,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차원에서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구별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세이어가 지적하는 부당소유의 핵심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타인을 배제하고 그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점이다.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권리 측면에서 정당화되지만,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시된다. 세이어는 “우리가 무소유자에게 먼저 재산과 그에 따른 배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당화를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sup>44)</sup> 성서와 기독교 전통 역시 ‘약자 보호’와

‘공동체 연대’의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부당소유 개념에 근거한 지대추구주의 비판은 기독교경제윤리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문제는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구별이다. 전자가 노동에 기반한 소득으로서, 생산적 투입에 대한 보상이라면, 후자는 노동이나 지위 또는 법적 자격(다양한 형태의 사회임금/복지수당 수혜 자격)과 연결되지 않고 오직 사적으로 소유된 희소한 자원(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 즉 소유권에 기반한 소득이다. 후자는 대체로 이윤·지대·이자 등의 형태를 취하며, 주식·토지·특허·저작권·화폐·그 외 임대 가능한 모든 자산에서 비롯된다.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구별은 도덕경제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대추구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자들이 가진 부의 원천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이어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구별은 불로소득이 확대된 바로 그 시기 동안(1980~2020) 학계에서 실종되었지만, 소득신고서의 여러 항목에도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구별 같은 형태로 흔적이 남아 있다. 우선 근로소득은 노동을 토대로 하며 그들이 생산하고 전달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가치를 가진다.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봉급을 받는 직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대가로 얻는 것이다. 그들의 급여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는 조건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일에 대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 액수 사이의 관계가 꽤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노동에 기반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근로소득이며, 그들이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용가치’(사용적 유용성)를 지닌다. 근로소득

44) 위의 논문, 1476.

인가 아닌가는 단순히 일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일이 직간접적으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일인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유용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인들에게서 돈을 추출하는 노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불로소득은 이미 존재하는 자산(토지, 건물 또는 장비)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해 ‘추출’(extract)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사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불로소득의 수령자들은 그들이 일할 능력이 있는지, 따라서 소득을 벌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주택자산, 예를 들어 집이 이미 존재한다면, 유지 비용 외에는 생산비용이 전혀 안 들 것이다. 기존 자산에서 불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받을 자격이 있어서’(deserving)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필요하고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because they can) 그렇게 한다. 이는 주요 자산의 불평등한 소유와 통제에 기반한 권력이다. 그들은 기존 자산을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재산권에 의해 통제력을 가진다. 이러한 ‘자산기반’(asset-based) 불로소득 수령자가 지대수취자(rentier)이다. 따라서 세이어의 불로소득 개념으로 보자면, 오늘날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확대와 더불어 최상위 부유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소득비율은 사실상 불로소득에 기반한 부당소득이다. 소득 수혜자 층의 구체노동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이어는 이런 상황을 자산이 풍부한 사람들, 즉 주식을 소유하고, 이자를 받으며,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 사이에 그려지고 있는 새로운 계급 분할로 인식한다.

확실히 세이어의 두 가지 주된 소득 형태의 분류는 직관적으로나 도덕

적으로나 강력하고, 분석적으로도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득 발생에 대한 인지적 지도를 그리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sup>45)</sup> 하지만, 노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그렇지 않은 불로소득의 구별에 근거하여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것은 화폐와 기타 경제적 수입에 대한 일상적 경험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 이분법을 교란하는 것으로 연금(pension)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은 근로소득 수급자들인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주로 사용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개인 부담금과 기업 부담금, 그리고 기금이 관리하는 자금 풀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로 구성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퇴직연금 수령자에게 소득이 지급될 때, 그것이 기금의 ‘근로(임금)’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불로(이자 수익)’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질문이 제기된다. 비단 연금이 아니더라도, 한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단순히 노동과 자산의 구별에 기초하여, 어떤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다른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구별하는 것은 자본 순환의 관점에서 다분히 일차원이다. 가령,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녀가 속한 은행은 전체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대부분의 이윤을 지대 추출을 통해 축적하지만, 개별 직원들은 그 은행에서 일함으로써 근로소득을 가져간다. 그렇다면 과연 그 소득이 순수한 근로소득일

45) 그런 점에서 세이어의 불로소득 개념은 토지지대에 과세하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조지(Henry George)의 접근을 연상시킨다. 성서의 회년 정신과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와 균등한 분배’를 위해 조지의 지대공유 사상을 기독교경제윤리적으로 고찰한 연구로는,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716-737 참조.

까?

나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노동자의 임금 자체가 이미 생산적 투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다면적인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가라타니(柄谷行人)의 말대로, “일정한 개별 자본이 얻는 이윤에는 다른 부문의 자본의 노동자나 독립 소생산자로부터 얻어진 잉여가치가, 또한 한 나라의 총자본이 얻는 이윤에는 해외(식민지)의 노동자로부터 얻어진 잉여가치가 배분되어 있다.”<sup>46)</sup> 가령, 방글라데시 버스 운전사와 한국 버스 운전사의 임금 차이는 생산적 투입, 효율성 또는 노력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다. 두 나라 버스 운전사의 임금은 구체노동의 외양만 놓고 보자면, 동일한 의미에서의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버스 기사의 임금이 방글라데시에 갔을 경우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두 나라 기사가 수행한 구체노동 간에 그 어떤 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버스 운전 서비스라는 생산물에 투여된 노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sup>47)</sup> 결국 두 나라 기사 간의 현저한 임금 격차는 노동과 무관하게 권력, 통제, 소유권, 기술 수준, 노동생산성, 국가별

46) Karatani Kojin, *Transcritique*, 이신철 역, 『트랜스크리티크』 (서울: 도서출판b, 2013), 384-385.

47) 유사한 관점에서 콕스 역시 지대추구 자본주의 이론가들의 개념은 놀랄 만큼 ‘현상 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경제적 접근을 취하는 이들에게 지대추구주의는 자본이 생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제공하고 제품의 공정한 분배라는 마땅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여겨진다. 그런 다음 지대가 무노동 무수익(“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원칙에 어긋나는 불로소득이라는 도덕적 비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콕스 또한 “생산 지점에서 전유된 잉여가치 역시 불로소득”임을 명확히 한다. 여기서 산업자본가 대(對) 지대추구자 간의 도덕적 우위 관계는 무너진다. 노동자들의 생산물로부터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산업자본가나 자산을 통해 이자나 지대를 추출하는 지대수취자나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별히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보다 더 문제시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Cox, “Rentierism and the Question of Capitalist Development,” 103-104.

GDP, 화폐 구매력, 물가,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의 위치 같은 역사적 조건들에 달려 있다. 이러한 논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약점이 많은 근로소득 개념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분석적 논리와 규범적 근거가 요청된다.<sup>48)</sup>

## 2.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의 대안적 근거들

부당소유 개념에 기초한 도덕경제적 관점의 지대추구 자본주의 비판의 취지를 이어받으면서도 굳이 여기에 문제적인 근로소득/불로소득의 구별을 추가하지 않고,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비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자원으로 ‘공유부’(the commons) 개념이 있다.<sup>49)</sup>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최근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사회학자 카라킬릭(Emrah Karakilic)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sup>50)</sup>

카라킬릭은 세이어와 더불어 지대추구 자본주의 연구를 주도해온 크리스토퍼스가 지대추구주의의 중심 자산으로 식별한 요소들 — 토지, 물과 같은 자연 자원, 지적 재산권, 전자기 스펙트럼,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

48) 그런 점에서 지대추구 자본주의 관련 저작들을 소개한 국내 학자들이 ‘Rentier Capitalism’을 ‘불로소득 자본주의’로 번역한 것은 관련된 다른 용어들(rent: 지대, rentier-seeking: 지대추구, retierism: 지대추구주의, rentiership: 지대추구체제, unearned income: 불로소득 등)의 사례와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대추구 자본주의 비판을 자본주의 노동윤리에 근거하여 단지 ‘불로소득’ 행태를 문제 삼는 것으로 오도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지대가 불로소득으로 환원될 수 없듯이, 지대추구 자본주의 역시 불로소득 자본주의로 축소될 수 없다.

49) 그 자체로 너무나 방대한 논의의 맥락을 지니고 있는 공유부의 이론적 지형을 여기서 소개하기는 무리이다. 공유부 개념에 관한 연구서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할 수 있다. 최현 외, 『공동자원의 영역들』 (서울: 진인지, 2019); 금민,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서울: 동아시아, 2020); 한디디, 『커먼즈란 무엇인가』 (서울: 빨간소금, 2024); 정영신 외, 『커먼즈 다시 그리기』 (서울: 풀씨, 2024).

50) Emrah Karakilic, “Rentierism and the Commons: A Critical Contribution to Brett Christophers’ Rentier Capit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4/2(2022), 422-429.

생성 데이터, 금융 자산 — 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공유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반부에서 지배적인 경제체제인 지대추구주의는 주로 남반구에서 생성된 공유부의 인클로저와 수탈에 기반한다는 것이 그의 주된 논점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카라킬릭은 공유부 개념을 자연 자원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한다. 그에 따르면 공유부는 자연의 선물(토지, 물, 숲 등)뿐만 아니라 인류의 축적된 일반 지성과 정서를 통해 창조된 인간 제작 자원(지식, 언어, 정보, 정서, 아이디어 등)도 포함한다. 더 나아가 공유부는 명사이자 동사로서, 이러한 자원들이 자본 관계에서 점점 벗어나는 방식으로 할당, 사용, (재)생산되는 과정(communing)까지 포괄한다.<sup>51)</sup>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카라킬릭은 지대추구주의를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닌 자본의 정치적 대항운동(counter-movement)으로 해석한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자본 관계의 전제조건은 “노동자와 그들의 노동 실현 조건 소유권 사이의 완전한 분리”이다. 공유부와 공유화 실천은 이러한 분리에 대한 위협이 되며,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의 전제조건인 분리에 한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대추구주의는 하비(David Harvey)가 말한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한 공유부의 인클로저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부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자본의 우선순위와 동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대안적 사회 시스템을 개발하는 공간에 분리를 강제하는 자본의 정치적 대항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52)</sup>

카라킬릭은 크리스토퍼스가 제시한 지대추구주의 극복 방안(경쟁 정책, 세금 시스템, 국가 주도의 새로운 경제 형성, 소유권)에 대해 더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시장이나 국가 모두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51) 위의 논문, 425-426.

52) 위의 논문, 423.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국가와 자본이 결합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불의, 비대칭적 권력관계, 환경 재앙, 우울한 삶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라킬릭은 공유부가 실제 소유자인 공유자(commoners)에게 속해야 하며, 오직 이들만이 특정 조건하에서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대안적 사회 시스템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53)</sup>

요컨대 카라킬릭은 크리스토퍼스의 경제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 지대추구주의를 정치적 계급 관계의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공유부와 공유화 과정을 지대추구 자본주의 비판의 규범적 토대로 삼으며, 이를 통해 대안적 사회 시스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더 급진적인 비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공유부 개념에 담긴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공유부”<sup>54)</sup>라는 생각은 그 자체로

53) 위의 논문, 426-427.

54) 강원돈, 『기독교경제윤리론』, 347. 실제로 이 책에서 강원돈은 공유부 개념을 기본소득의 정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기독교경제윤리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다(같은 책, 739-810). 그는 기본소득 구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공유부를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그 개념의 기독교경제윤리적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 강원돈은 우선 기본소득 연구자 금민의 공유부 개념과 기본소득 정당화 논리를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금민은 세계적인 기본소득 연구자 반 빠레이스보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자원을 공유부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특히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중대한 공헌을 이룩했다. 강원돈은 금민의 공유부 개념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재구성한다. 첫째는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의 ‘자연적 공유부’이고, 둘째는 이전 세대의 지식, 현세대의 협동을 통한 지식, 디지털 데이터 등의 ‘인공적 공유부’이다. 강원돈은 도시계획과 국토개발에서 발생하는 ‘도시 공유부’를 추가하여 인공적 공유부 개념을 확장하고 발전시킨다. 그리고 기업과 노동의 업적도 지식, 기술, 제도에 힘입은 것인 인공적 공유부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공적 소유에서 비롯되는 수익과 화폐 발행 수익(시노리지) 역시 공유부의 원천으로 추가한다. 특히 환경세와 탄소세도 공유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확장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온전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결정적으로 강원돈은 인공적 공유부의 목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생성되고 새롭게 발굴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공유부 개념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강원돈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적 구상에서 제시한 공유부 개념은 지대추구 자본주의 비판에도 기독교경제윤리적

매우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유부 개념이 지니는 신학적 함의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신학적 전통과의 관련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공유부는 바울신학의 ‘선물’(gift) 개념과 의미상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바울서신에서 ‘카리스’(*cháris*, *κάρις*)라는 단어는 단순한 ‘은혜’(*grace*)의 의미를 넘어 ‘선물’(gift), ‘무조건적인 베품’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진다고 강조하며(롬 1:5; 고전 15:9-10; 고후 8:9, 9:15),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공유부 개념과 유사한 논리를 지닌다. 즉, 인간이 향유하는 물질적·사회적 자본은 특정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축적과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유산으로서, 신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선물’처럼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기독교경제윤리적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사회정책학자인 토리(Malcolm Torry)는 바울신학에서 무조건적 은혜 개념을 끌어내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가 특정한 자격 조건 없이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경제적 부 역시 일부 계층만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은혜/선물 개념을 공유부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sup>55)</sup> 이처럼 공유부를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이 애초에 공동선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한다면,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

근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

55) Malcolm Torry, *Citizen's Basic Income: a Christian Social Policy*, 박기주 역, 『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20), 21-40.

경제윤리적 규율 방안은 현재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유부의 소득을 보다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을 제안하는 쪽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sup>56)</sup>

둘째, 공유부는 민중신학자 안병무(安炳茂)의 ‘공(公) 개념을 통해서도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안병무는 1986년 발표한 “하늘도 땅도 공(公)이다”라는 글에서 창세기의 낙원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의 개념을 제안했다.<sup>57)</sup> 그는 성서가 그리는 낙원의 모습을 “인간 삶의 한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며, 이것이 단지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인간 역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제시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안병무에 따르면 인간과 미인간을 망라한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바로 그러한 더불어 사는 조건을 형성하는 ‘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존재로서의 창조성과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 공의 의미를 단순히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요청되는 사회적·생태적 조건에 국한하지 않고 창조 질서로까지 소급되는 신성한 인간의 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은 모든 물질적 세계가 신의 것이며, 인간은 그 물질세계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중대한 윤리적 함의를 갖는다.

안병무는 ‘땅’으로 포괄되는 사회적 세계와 자연적 세계 일체가 신의 것이며, 인간은 단지 식객처럼 자신에게 허락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날까지 경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sup>58)</sup> 그리고 이러한 공의 지평을

56) 바울신학의 선물 개념을 통한 기본소득의 신학적 정당화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정용택, “보편적 기본소득의 바울신학적 정당화: 참여소득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109(2022), 175-220 참조.

57) 안병무, “하늘도 땅도 공이다,” 『신학사상』 53(1986), 442-449. 안병무의 ‘공’ 개념에 관한 민중신학 및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검토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최형묵, “탈/향의 기억 그리고 공(公)의 상상력,” 김진호 외, 『죽은 민중의 시대 안병무를 다시 본다』 (서울: 삼인, 2006), 203-230; 강원돈, “심원 안병무 선생의 윤리사상,” 『신학사상』 139(2007), 256-257; 최형묵, 『민중신학 개념 지도』 (서울: 동연, 2023), 89-112.

단지 땅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물질세계, 더 나아가 정치적 권력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그는 “권력도 ‘공’이지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sup>59)</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병무가 공의 개념을 단순한 신학적 언어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한국 민중운동의 현실에 뿌리를 둔 실천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는 “나를 그동안 지배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엄청난 민중사건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국시’라도 되듯이 굳혀가는 마당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민족통일이라는 민중적 염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공(公)’이라는 사상이다”라고 설명한다.<sup>60)</sup> 더 나아가 안병무는 공의 개념을 ‘하느님 나라’와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공의 실현이 곧 하느님 나라의 실현임을 강조한다. “하느님 나라가 실제로 뭐냐? 그것은 공을 공으로 돌리는 것이다. 사유화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걸 포함해서 사유화함으로써 분열되고 찢겨진 그것을 다시 공으로 돌리는 일은 하느님 나라의 성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sup>61)</sup>

이처럼 안병무의 공 개념은 카라킬릭이 말하는 공유부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의미구조를 드러낸다. 두 개념 모두 사회적 차원과 자연적 차원을 포괄하는 일체의 물질세계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접근되고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독점과 사유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공유한다. 또한 두 개념 모두 단순한 자원의 공유를 넘어 사회적 관계의 변혁, 즉 지배-종속 관계를 넘어서는 새

58)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205-206.

59) 위의 책, 210.

60) 안병무,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7.

61)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246.

로운 공동체적 관계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안병무의 공 사상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역사화, 즉 종말론적 이상을 현실 세계 속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사람이 악하게 되어 가지고 전쟁 위협에 몰아넣는 것도 결국은 자본의 독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 그런데 정말 종말을 사는 사람은 단순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종말이 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 한복판에서 그런 독점 세력과 싸워 나가지요. 그것을 끝장이 나도록 싸우는 것이 하느님 나라 곧 종말로서의 하느님 나라 현실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독점 세력과의 투쟁, 그것이 종말을 사는 사람의 삶의 자리입니다.<sup>62)</sup>

이는 기독교경제윤리가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실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혁을 위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때, 기독교경제윤리는 그 자체로 불의한 경제체제를 지양(止揚)하는 규제적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유부는 한편으로 바울신학의 선물 개념을 통해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민중신학의 공 개념과 논리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기독교경제윤리가 지대추구 자본주의 비판을 위한 규범적 근거로 삼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따라서 공유부 개념을 바울신학의 선물 개념 및 안병무의 공 개념과 연결하여 신학적으로 확장하면,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의 문법과 대안적 경제질서에 관한 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62) 안병무, 『불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84.

## V. 나가는 말

이 글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성격과 문제점을 기독교경제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경제윤리의 학문적 위치를 사회윤리의 특수한 형태로 규정하고, 그 연구 대상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비판을 검토하며 지대추구 자본주의가 이전의 산업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특히 제Ⅲ장에서는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출현과 특성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았다. 1970년대의 경제위기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형성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과정이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대추구 자본주의가 자산의 소유와 통제를 통해 창출된 수익에 의존하며, 생산적 노동이나 실질적 가치 창출과 무관하게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임을 밝혔다. 도덕경제적 관점에서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세이어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그가 제시한 ‘정당한 소유’와 ‘부당소유’, 그리고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구분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구분이 실제 경제 현실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론적 약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글에서는 ‘공유부’ 개념에 기초한 기독교경제윤리적 비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공유부 개념은 바울신학의 ‘선물’ 개념과 민중신학의 ‘공’ 개념을 통해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경제 질서에 관한 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윤리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경제윤리는 이러한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 질서를 위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기독교경제윤리적 관점에서 지대추구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유부 개념에 기초한 대안적 경제 모델의 구체화와 실천적 적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경제윤리는 오늘날의 경제적·사회적 불의에 대응하는 실천적 지혜와 규범적 지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돈. “신학적 경제윤리 형성을 위한 시론.” 「신학사상」 76(1992), 67-92.
- \_\_\_\_\_. “심원 안병무 선생의 윤리사상.” 「신학사상」 139(2007), 227-266.
- \_\_\_\_\_. “교의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기독교사 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치.”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39-76.
- \_\_\_\_\_. 『기독교경제윤리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 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서울: 동연, 2024.
- 금민.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서울: 동아시아, 2020.
- 김미경. “자본주의 진화와 다양성: 신자유주의에 관한 신화와 오류.” 「국제정치논 총」 52/2(2012), 311-336.
- 박찬중. “금융화: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 「말과행」 11(2016), 321-337.
- 배병인. “금융화와 민주주의 위기의 정치경제: 민주적 자본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17/1(2024), 1-26.
-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서 울: 그린비, 2006.
- 안병무. “하늘도 땅도 공이다.” 「신학사상」 53(1986), 442-449.
- \_\_\_\_\_.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_\_\_\_\_.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_\_\_\_\_.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_\_\_\_\_. 『불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이승철. “익숙하고도 낯선 자본주의—신체굴주의와 기술 봉건제에 대한 몇 가지 단 상.” 「문학동네」 120(2024), 88-105.
-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1.
- 정영신 외. 『커먼즈 다시 그리기』. 서울: 풀씨, 2024.
- 정용택. “금융화된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신학: 물신숭배 비판을 중심으로.” 「신학 사상」 198(2022), 75-119.
- \_\_\_\_\_. “보편적 기본소득의 바울신학적 정당화: 참여소득 이론을 중심으로.” 「신 학논단」 109(2022), 175-220.

- \_\_\_\_\_. “자산화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가치형태의 문제를 중심으로.” 『뉴레디컬리뷰』 7(2023), 35-69.
- \_\_\_\_\_. “무늬만 대작이 아니다.” (2024.6.19.)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76>, 2025년 3월 15일 접속.
- 최경석. “강원돈의 『기독교경제윤리론—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에 대한 서평.” 『신학사상』 205(2024), 303-314.
- \_\_\_\_\_. “강원돈의 기독교 경제윤리의 유형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9(2024), 89-118.
- 최현 외. 『공동자원의 영역들』. 서울: 진인지, 2019.
- 최형묵. “탈/향의 기억 그리고 공(公)의 상상력.” 김진호 외. 『죽은 민중의 시대 안 병무를 다시 본다』. 서울: 삼인, 2006, 203-230.
- \_\_\_\_\_. 『민중신학 개념 지도』. 서울: 동연, 2023.
- \_\_\_\_\_.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대작.” (2024.7.5.)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19>, 2025년 3월 15일 접속.
- 한디디. 『커먼즈란 무엇인가』. 서울: 빨간소금, 2024.
- 홍인식. “시장경제체제를 ‘규율’해 ‘해방의 사회’로.” (2024.5.31.)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19>, 2025년 3월 15일 접속.
- Abraham, Ibrahim. “Capital, Culture and Contradictions: Contemporary Christian Economic Ethics.” *Pacifica* 22/1(2009), 53-74.
- Birch, Kean. *A Research Agenda for Neoliberalism*. Cheltenham: Elgar, 2018.
- Birch, Kean & Callum Ward. “Introduction: Critical Approaches to Rentiership.” *Environment & Planning A: Economy & Space* 55/6(2023), 1429-1437.
- \_\_\_\_\_. “Assetization and the ‘New Asset Geographies.’”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4/1(2024), 9-29.
- Bowles, Samuel et al. *Understanding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Christophers, Brett. “Risking Value Theory in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e and Na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3(2018), 330-349.

- \_\_\_\_\_. "The Problem of Rent." *Critical Historical Studies* 6/2(2019), 303-323.
- \_\_\_\_\_. "The Rentierization of the United Kingdom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5/6(2023), 1438-1470.
- \_\_\_\_\_. *Rentier Capitalism: Who Owns the Economy, and Who Pays for It?*. 이병천 외 공역.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누가 경제를 지배하고 그들은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가?』. 서울: 여문책, 2024.
- Cox, Kevin R. "Rentierism and the Question of Capitalist Development." In Balihar Sanghera ed., *Global Rentier Capitalism: Theory and Development*, 96-107.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4.
- Duménil, Gérard & Dominique Lévy. "Periodizing Capitalism: Technology, Institution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In Robert Albritton et al. eds.,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Boons, Crises and Globalizations*, 141-162.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1.
- \_\_\_\_\_. *Managerial Capitalism*. 김덕민 역. 『관리자본주의』. 성남: 두번째테제, 2023.
- Durand, Cédric. *Fictitious Capital: How Finance Is Appropriating Our Future*. London: Verso, 2017.
- Elder-Vass, Dave. "Moral Economy: A Framework and a Manifesto." In Balihar Sanghera & Gideon Calder eds., *Ethics, Economy and Social Science: Dialogues with Andrew Sayer*, 97-105.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2.
- Hudson, Michael. *The Destiny of Civilization: Finance Capitalism, Industrial Capitalism or Socialism*. 조행복 역. 『문명의 운명: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인가』. 서울: 아카넷, 2023.
- Karakilic, Emrah. "Rentierism and the Commons: A Critical Contribution to Brett Christophers' Rentier Capit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4/2(2022), 422-429.
- Kojin, Karatani. *Transcritique*. 이신철 역. 『트랜스크리티크』. 서울: 도서출판b, 2013.
- Otani, Teinosuke. *A Guide to Marxian Political Economy*. Berlin: Springer, 2018.
-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장경덕 역. 『21세기 자본』. 서울: 글항아리, 2014.

-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Bd. 1,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강원돈 역.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_\_\_\_\_. *Wirtschaftsethik, Bd. 2, Marktwirtschaft, Planwirtschaft, Weltwirtschaft aus sozioethischer Sicht*. 강원돈 역. 『경제윤리 2: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시장경제, 계획경제, 세계경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 Sanghera, Balihar. "Critical Introduction." In Balihar Sanghera ed., *Global Rentier Capitalism: Theory and Development*, 1-13.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4.
- Sanghera, Balihar & Elmira Satybaldieva. *Rentier Capitalism and Its Discontents*. Berlin: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1.
- Sayer, Andrew. "Moral Economy as Critique." *New Political Economy* 12/2(2007), 261-270.
- \_\_\_\_\_. "Moral Economy, Unearned Income, and Legalized Corruption." In David Whyte & Jörg Wiegratz eds., *Neoliberalism and the Moral Economy of Fraud*, 44-56.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6.
- \_\_\_\_\_. "Approaching Moral Economy." In Christoph Henning ed., *The Moralization of the Markets*, 77-98.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7.
- \_\_\_\_\_. "Rentiership, Improperly, and Moral Economy." *Environment & Planning A: Economy & Space* 55/6(2023), 1471-1484.
- \_\_\_\_\_. *Why We Can't Afford the Rich*. 전강수 역.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서울: 여문책, 2024.
- Standing, Guy.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김병순 역. 『불로소득 자본주의: 부패한 자본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서울: 여문책, 2019.
- Torry, Malcolm. *Citizen's Basic Income: a Christian Social Policy*, 박기주 역, 『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20.
- Wright, Erik Olin. *Envisioning Real Utopia*. 권화현 역. 『리얼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서울: 들녘, 2012.

논문투고일: 2025년 03월 16일

심사개시일: 2025년 03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05일

---

• 국 문 소 록 •

---

본 연구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새로운 형태로 부상한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기독교경제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생산적 노동이나 실질적 가치 창출 없이 자산 소유권과 통제력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체제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 연구는 도덕경제적 관점에서 지대추구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세이어의 '부당소유'와 '불로소득' 개념을 검토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다. 대안으로 '공유부'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바울신학의 '선물' 개념 및 민중신학자 안병무의 '공' 개념과 연결하여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경제윤리가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를 위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위기에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지대추구 자본주의, 부당소유, 불로소득, 공유부, 공(公), 선물

---